光州日報

제1761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6년 11월 28일 (음력 10월 8일) 화요일

광주·전남 6천명 '종부세 폭탄'

가족합산 6억원 이상…3.6배 급증

내년 과세율 10%⬆ 위력 더할 듯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종부세 부과대상이 대폭 늘었다. 〈관련기사 11면〉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북지역의 종부세 부과대상은 지난해 2천422명보다 4배 가량 늘어난 9천190명으로 집계돼 그야말로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됐다.

광주·전남은 지난해 1천584명에서 5천770명으로, 전북은 838명에서 3천420명으로 급증했다. 이중 토지를 제외한 개인주택분 부과대상자는 광주 800세대(전체 23만7천세대의 0.3%), 전남은 500세대(0.2%)에 달한다.

이에 따라 부과대상자의 종부세 총액도 지난해 98억원에서 1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전국 종부세 부과대상자는 지난해 7만4천명에서 35만1천명(법인 1만4천개 포함)으로 크게 늘었고, 종부세 총액도 1조7천273억원에 달해 지난해의 2.7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정부가 과세부동산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 초과로 강화하고, 부과대상도 개인에서 세대로 대폭 확대해 부과대상자가 크게 늘었다"면서 "아파트와 토지가격이 크게 오른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종부세는 올해보다 내년 이후에 더욱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적용율이 부동산의 경우 올해 70%에서 2007년 80%, 2008년 90%, 2009년 100%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4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용 합산토지도 올해 55%에서 오는 2015년까지 매년 5%P씩 과세적용율이 상승한다.

이 결과 2009년 종부세 대상자들의 실효세율(보유세/시가)이 1% 수준에 이르게 되면, 10억원 규모의 부동산 보유자는 대략 1천만원 정도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해 세대별 또는 사람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을 말한다.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는 취지로, 2003년 10·29대책 때 도입돼 2005년부터 누진세율을 적용해 시행되고 있다.

서울과 광주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모씨(56)는 "자식들 학업을 위해 수년전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종부세 부담이 적지않아 걱정"이라며 "정부가 종부세를 폐지하든가,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하는 부담을 줄여주든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자진납부기간인 오는 12월 1~15일 종부세를 내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내년 2월초 각 세무서가 발송하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도 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매달 0.9%의 가산금이 붙는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겨울 재촉하는 '노란비' 하늘도 땅도 온통 노랗게 물들고, 쏟아지는 은행잎은 겨울을 재촉하는 노란 비가 됐다. 27일 오후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주택가에서 초등학생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은행잎을 우산으로 받으며 마냥 즐거워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익산·평택·양평 이어 서산서도 '양성' 판정

전국 AI 공포…전남 차단 비상

전북 익산에서 발견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사람에게 감염되는 고병원성으로 판명된 가운데 경기도 평택과 양평, 충남 서산 등지에서 잇따라 저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남지역 닭·오리 사육농가에서도 위기감이 높아가고 있다. 〈관련기사 7·11면〉

농림부는 최근 일주일 간 1천여 마리의 닭이 죽은 충남 서산 닭 사육농장의 폐사 원인이 저병원성 AI로 추정된다고 27일 밝혔다.

이 양계농장은 지난 15~22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전북 익산 종계농장의 알을 공급받은 익산 소재 부화장 2곳에서 병아리를 구입한 농가 중 하나다.

27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가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AI는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고병원성이 발견된 익산 외에 다른 지역에도 AI의 잠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처럼 전국에서 잇따라 AI가 발생하면서 3천95만여 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는 전남도 내 791개 농가와 440만여 마리의 오리를 기르고 있는 300개 농가에서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전남도는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대책상황실을 확대 운영하는 등 방역대책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전북 익산의 양계장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67개 농가는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특별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전효숙 지명 철회

盧대통령, 전 후보자 요청 수용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철회했다. 지난 8월 16일 전효숙 당시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에 지명한지 약 3개월만이다. 〈관련기사 3면〉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 헌재소장 후보자로부터 지명 철회 요청을 받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헌법재판관 및 헌재소장 지명을 모두 철회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 이후에 전 후보자의 지명 철회 요청을 받고 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며 "본인의 요청이 있어서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또 이날 사실상 자진사퇴를 압박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답한 뒤 "전 후보자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덜고 헌재소장의 장기 공백 사태를 빚고 있는 현재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는 뜻에서 (지명 철회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정혼란을 피하고 파행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결정"이라며 긍정 평가하고,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국회 정상화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계기로 국정운영을 원만하게 하고 식물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한나라당이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평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국정을 마비에까지 이르게 한 데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백배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힌 뒤, 여·야·정 정치협상회의에 대한 입장변화 가능성과 관련, "그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이 문제는 정치협상회의와는 별개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與, 대통령만찬 거부

독선적 국정 반발…黨-靑 갈등 고조

여당이 대통령 만찬 초청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저녁 청와대에서 김근태 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비대위 지도부와 상임고문단 등을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가지려 했으나 당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관련기사 3면〉

우리당 관계자는 이날 "오늘 점심 때쯤 청와대 쪽으로부터 오늘 저녁 만찬 연락을 받았다"며 "그런데 만찬 간담회 규모나 형식이 당 지도부와 터놓고 솔직한 의견교환을 나눌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해 행사를 갖지 않는 쪽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김근태 의장이 지난주 초부터 청와대측에 면담을 하자는 요청을 해왔는데 가타부타 언급이 없었다"며 "청와대가 우선 당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이 청와대의 만찬초청을 거부함에 따라 그간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출자총액제한제도, 부동산 정책 등 주요 국정현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당청관계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우리당의 독자행보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제55기 수습기자 최종합격자 명단

강상인 김여울 장덕종

光州日報社